

#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이익 누리는 수산물 유통 “새 틀” 짚다

- 불필요한 유통비용은 줄이고 가격은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구조 개편
- 디지털·스마트 혁신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4일(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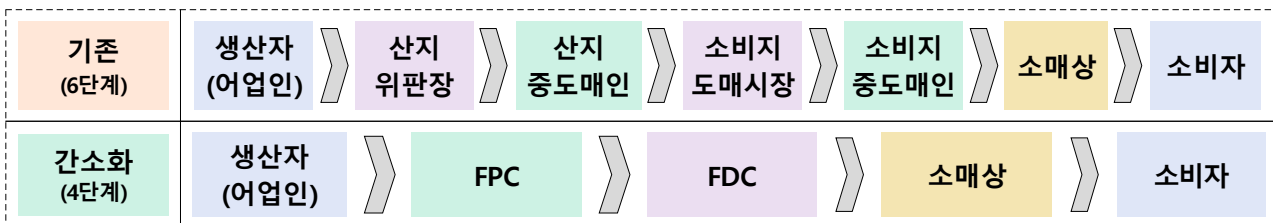
그간 수산물은 어획 후 위판장,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 및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 유통비용률 10% 절감, ▲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 ▣ 유통경로 간소화로 유통비용 줄여... 노후된 위판장도 현대화

- 기존 6단계로 이루어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4단계로 간소화된 유통경로도 활성화한다.

\* (FPC) 산지 특성을 반영한 상품·상표 개발 / (FDC) 신규 판로 확보 등 추진



-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여 수산물 품질과 위생을 유지하고, 바닷가 인근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해 카페·레스토랑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투자 수요를 창출한다.

## ■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 대폭 확대, 판매자 진입장벽도 낮춰

-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재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춘다.
  - \* (기존) 판매자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제한, 산지 중도매인은 구매자로만 가입 가능 (개선) 판매자 거래 규모 요건 삭제, 산지 중도매인도 판·구매자 모두 가입 가능
- 또한, 수협공판장과 여신 시스템을 연계(9개소, ~2028년)하여 거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등급 판별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 어업인들이 조업 후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위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 이와 함께,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영상을 수집하여 자동으로 기록하고,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 내 집 앞에서 만나는 신선한 수산물 전문 직매장 마련

-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 \* 수도권 30개소(25) → 충청권 30개소(26) → 단계적 확대
- 기존 도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식당 등으로 실시간 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내 단순 가공·분산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판매·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 스마트양식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물가 변동성 줄여

-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품종 전환 및 양식지 이동 시 지원을 강화하고, 종자시설의 스마트·자동화 지원(30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 또한, 고수온 등 대량 폐사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후 재해 복구 중심에서 피해 예방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 긴급방류 제도 절차 개선, 재해대응 장비 사전 보급 확대 등 추진

## ■ 인공지능(AI) 기반 수급 예측모형 개발로 시장 대응력 강화

-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수급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인공지능(AI) 기반 종합예측모형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 어획산 6종(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 양식산 4종(김·굴·전복·광어) 등

- 또한, 수산물에 특화된 소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통구조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 ■ 체계적인 도매시장 물량 관리로 가격 급등·급락 방지

- 도매시장별 상품·거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주요 도매시장부터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2027, 가락시장). 전자송품장을 통해 위판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격의 급등·급락을 방지한다.
- 또한, 결제자금 융자 지원 확대 등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여 경매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 ■ 어획부터 유통까지 투명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 높여

- 유통의 시작점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위판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 등 수협·바다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어획증명제 도입·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대형유통사와 양식장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유통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산물 유통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으로서,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신뢰받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044-200-5441)

## I 배경 및 문제점

## □ 추진배경

- 수산물은 전통적인 유통경로인 위판장, 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되나, 이동·대기시간에 따른 유통 효율성 저하로 근본적 개선이 요구
- 다만,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나 노동집약적·비표준화된 수산 현장으로 ICT 활용이 미흡한 수준
  - 최근 발전하고 있는 AI, ICT 등 기술 적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 문제점

- ① (높은 유통비용) 쉽게 부패·변질되는 특성상 콜드체인이 필수적이며, 유통과정상 필수시설(냉동, 수조 등)로 농산물 대비 높은 유통비용 발생
  - \* 수산물 유통비용률은 평균 63.5%로 농산물(49.2%)에 비해 높은 편('23)
  - 복잡한 경로, 현장 경매·수작업 중심의 구조 또한 불필요한 유통비용 야기
- ② (높은 가격변동성)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위판장·도매시장의 경매제는 단기 가격 변동을 부추기는 요인
  - \* 연근해 생산량(톤): ('15) 1,058,319 → ('20) 933,880 → ('24) 841,347  
(오징어) '20년 56,989톤 → '24년 13,546톤, (명태) '00년 86,832톤 → '24년 28,999톤
  - 더불어, 소비자 유통 정보 접근성 부족은 수산물 유통환경에 대한 신뢰 저하

## □ 유통구조 개선 기본방향

- (구조) 온라인 도매시장 등 간소화된 유통경로를 활성화하고, 단축된 신(新)유통경로 신설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 기존 도매시장은 전자송품장 도입으로 물량 분산, 거래방식 전환(경매→정가·수의 매매) 유도 등 제도개선 병행
- (생산) 적정생산량 예측을 통한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적 공급
- (소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이력제 확대 등을 통해 신뢰 제고

## 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1 비전 및 목표

#### 비전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

#### 목표 (~ '30)

- ◆ 수산물 유통비용률 10% 절감
  -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 5,000억원
- ◆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
  - 연도별 소비자가격 : ('20~'24) 17.4% → ('25~'30) 13% 이하

#### 추진 방향

#### 8 대 추진 과제

#### 비용 절감

##### 유통경로 간소화

- ① 위판장 현대화, FPC·FDC 확충 및 연계 강화로 유통 간소화
- ②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

##### 신(新)유통경로 신설

- ① ICT 기반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자 직통 경로 구축
- ② 소비자 직매장 설치 등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

#### 가격 안정

##### 스마트 혁신으로 공급망 안정화

- ①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양식 확산으로 생산기반 강화
- ② 수급 예측, 공급망 관리 고도화로 가격 안정 및 대응력 강화

##### 디지털 기반 유통 투명화

- ① 도매시장 물량 분산 기반 마련을 통해 가격변동성 완화
- ② 어획증명제, 수산물 이력제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 ① 유통경로를 간소화하여 유통비용 절감

### ① 위판장 현대화, FPC·FDC 확충 및 연계 강화로 유통 간소화

-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는 동시에 산지거점유통센터<sup>FPC</sup>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sup>FDC</sup> 확충\* 및 연계 강화<sup>6단계→4단계</sup>

\* 저온 및 거점 위판장('25→'26): 83.5→102.1억 / FPC: 31.95→63.9억 / FDC: 3.75→30억

- (위판장)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양륙 단계부터 저온유통·친환경 설비로 운영하여 수산물 품질 및 위생 유지
  - \* 위판장 현대화 시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로 전환 의무화하여 위생적인 유통 환경 조성
- (FPC) 산지 특성을 반영한 상품·상표 개발로 FPC를 브랜드화하고, 가공·판매 활성화를 위한 가공 역량 및 생산자 연계방안 평가
- (FDC) 쿠팡 등 유통플랫폼과 협업하여 FDC에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 상하차, 분류 등 자동물류시스템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②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

- 온라인 도매시장<sup>6단계→4단계</sup>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60→134개),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 「수산물유통법」상 산지 중도매인은 산지 수산물을 소비지로 분산(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안법상 중도매인과 동일하게 구매자만 가입 가능

- 정산·결제자금 융자 지원(105억원), 수협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 간 여신 시스템 연계(~'28, 9개소)를 통해 진입장벽 제거

## ② 신(新) 유통경로 신설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

### ① ICT 기반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통 경로 구축

- 조업 후 귀항 중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위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판장에서 하역·선별·경매과정 단축 등 유통비용 축소<sup>6단계→3단계</sup>

\* 모바일기기로 접속한 중도매인이 어업인 선상에서 사전 입력한 정보(어획위치, 어종, 물량 등)와 실시간 어획물 상태 확인하는 온라인 위판 운영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5억원 '26년~)

- 수산물 유통체계 혁신을 위한 ICT 기반 디지털 유통관리 체계 구축('26~)
  - 일시다확되는 대중성 어종(고등어, 갈치 등)을 대상으로 유통 단계별 영상 수집·인식 및 AI 기반 분석 체계 구축('26~)

## ② 소비지 직매장 설치 등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

-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sup>6단계→4단계</sup> 설치 지원('25~)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물류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 축소
  - \* 수도권 30개소('25) → 충청권 30개소('26) → 단계적 확대
- 온라인으로 축소된 도매시장에 식당 등으로 실시간 배송체계<sup>6단계→5단계</sup>를 구축하고, 관광 프로그램(식문화, 현장체험 등) 신설로 소비 활성화

## ③ 데이터 기반 수급 관리 및 스마트 혁신으로 공급망 안정화

### ①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양식 확산으로 생산기반 강화

- 사후 재해 복구지원에서 재해 피해 예방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 긴급방류 제도 절차 개선\*, 재해 대응 장비 사전 보급 확대 등 피해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유지
    - \* (기존) 어업인 신청·조사 → 해수부장관 사전협의 및 결정 → 방류
    - (개선) 품종·크기별 방류가능량 사전통지를 통해 어업인 신청·조사 → 방류
- 수급 예측 고도화 등으로 적정 생산면적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양식면적 조정 및 계약생산 확대(408억원, ~'26)
  - 출하·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현재 18개 품목)하고, 최근 가격 변동성이 큰 '김'은 양식 면적 확대 및 계약생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가격 관리
- 상습피해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품종 전환·양식지 이동\*\*에 지원 강화
  - \* 양식산업발전법령 개정안 마련(~'25.下)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양식업 경영 안정화 추진
  - \*\* 기후변화대응시범양식지원('26) : 16개소, 32억원
-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 지구' 선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및 스마트 장비 보급\*\* 등 스마트 양식업으로 전환
  - \* ('25) 강원/연어, ('26) 포항/연어, 신안/새우, 제주/넙치, ('28) 당진/바다송어
  - \*\* ('25) 15개소 지원 (51억원) → ('26) 25개소 지원 확대 (125억원)

## ② 수급 예측, 공급망 관리 고도화로 가격안정 및 대응력 강화

- 수산물 수급예측모형 개발\*,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AI 기반의 종합 예측모형 고도화 추진 등 선제적 시장 대응력 확보

\* 어획산 6종(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양식산 4종(김, 굴, 전복, 광어) 등

- 주요 품목별 수급 전망에 따른 필요 적정생산 규모 산출·적용, 수급 불안시 공급국 확보·대체품 개발 등 공급망 관리 전략 마련

- 수산물에 특화된 소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구매패턴 분석(5억, '26~)

## ④ 디지털 기반 유통 투명화로 가격안정 및 신뢰 제고

### ① 도매시장 물량 분산 기반 마련을 통해 가격변동성 완화

- 시장별·품목별 거래 데이터 표준화 추진, 위판 플랫폼과 연동 및 전자송품장 시범 적용\*( '27~)으로 가격 급·등락 방지\*\*

\*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대중성 어종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27~)

\*\* 전자송품장 적용 시 위판장에서 도매시장 유통 물량 등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되어 물량 집중 시 사전에 분산 유도 가능

- 경매의존도 완화, 안정적 가격 형성을 위해 결제자금 지원 확대(50억원→109억원), 용자 조건 완화 등으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 ② 어획증명제, 수산물 이력제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 표준화된 어종 코드 개발, 온라인 위판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 등 바다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단계부터 정보제공 강화

\* 수협 일선 조합이 어획된 수산물을 위판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산지 어획량, 어가 등 데이터를 축적한 수협의 근간 시스템

- 수산물 이력제 및 유통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투명한 관리 체계 마련
  - 컨설팅, 물품 지원 확대(33.5→38.5억원) 등을 통해 이력제 가입을 유도하고, 대형유통사·양식장 참여 확대를 위한 '수산물 유통법령' 개정
  - 수산물 위생에 중요한 콜드체인 유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안심스티커'\* 활용 단계적 확대\*\*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 일정시간 특정 유지 온도에서 벗어날 경우 '색'이 변하게 설정되어 있는 스티커

\*\* 정부 비축수산물부터 시범적용하고, 향후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홍보